

## 1. 재선 성공의 의미와 향후 세계전략

### 가. 공고해진 추진력

- 2000년 대선에 이어 또다시 공화당, 민주당간의 접전 속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당초 예상보다는 신속하고도 분명하게 승부가 결정지어졌음. 부시대통령은 선거인단 확보수(286대253), 득표율(51%대48%), 승리한 주의 수(31대19) 등 모든 주요 지표에 걸쳐 우위를 획득함으로써 선거결과 판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불식될 것으로 보임. 오하이오주의 잠정투표 집계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패배를 인정한 케리 후보 측의 결정으로 미 대선절차에 대한 공정성 시비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임. 상하원에 대한 공화당의 우위 역시 더욱 견고해져 부시대통령의 국내차원의 추진력은 한층 공고해졌음.
- 경제 및 사회복지 등 비안보 분야보다는 국가안보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쟁점으로 떠올랐던 이번 대선에서 미국 국민들의 과반수는 부시대통령의 손을 다시 한번 들어줌으로써 대 테러전의 와중에 같은 지도자가 일관되게 미국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주문하였다고 평가됨. 이라크 전쟁이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케리 후보 측의 집요한 비판에서 불구, 미국 시민들은 9/11사태 이후 제기된 미국의 안전과 세계평화 문제에 더 주목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임.

### 나. 이라크의 안정 및 민주화 추진

- 제2기에 들어서서는 부시행정부는 이라크의 안정화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세워둔 향후 이라크 민주화일정의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차적으로는 이라크북부 모술(Mosul) 중심의 니나와(Ninawa)주와 중부 순니 삼각지역의 치안불안을 다스려야 하며, 2차적으로는 2005년 1월

까지 제헌의회(constitutional assembly) 구성, 10월까지 신헌법 추진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12월까지 신헌법에 의한 정부구성을 위한 총선거 등의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야 함.

- 미국은 이라크 안정화와 민주화 정착을 꾀함에 있어 동맹국들과의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유럽 및 중동 역내 주요국들이 참가하는 UN중심의 평화활동도 모색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이라크상황의 호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자산요인은 강력한 치안병력, 고도의 정보력 등 물리적 요건이라는 점에 비출 때, 여전히 미국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러한 필요조건을 충족 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구사할 수밖에 없을 것임. 따라서 이라크문제의 장기화에 따른 관리비용의 부담을 떠안은 채 미국정책기조의 정당성도 제고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에 직면할 것임.
- 제2기 부시행정부는 주요국으로부터 '일방적 패권주의(unilateral hegemonism)'를 행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보다 중시하는 다자적(multilateral) 접근을 꾀함으로써 태도와 정책 스타일 측면에서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그러나 '민주화 정착'으로 귀결되어야만 '성공'이라고 판정받을 수 있는 이라크 문제는 제3자 국가들간 대화와 타협의 산물로 주어질 문제가 아님. 현지의 열악한 민주주의 토양, 주변 왕정국가들의 민주화 확산에 대한 견제심리, 반미 테러주의자들이 피하는 이라크의 戰場化 등의 도전요인들을 동시에 제어해 나가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음.

#### 다. 공세적 일방주의의 유연화 가능성

- 향후 부시행정부가 추진할 세계전략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세워질 것으로 보임. (1)반테러, 반WMD 캠페인은 미국의 안보이익 뿐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지속돼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

감대 조성; (2)이라크와 중동지역의 안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기득권층의 반발과 현지 이슬람권의 반미정서를 관리하는 완충장치의 마련; (3)북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시키고자 하는 개입외교에서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세력들의 공감대와 적극 협조 확보; (4)해외미군 재배치와 주요국들과의 동맹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중장기적인 세계정책 추진의 발판을 마련.

- 부시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핵심 브레인들의 발상은 테러, 핵무기 추구 등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요소가 반민주,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키워진다는 도덕적 가치 내지 종교적 믿음에 기초하고 있음. 자연히 문제의 근본적인 처방은 인권개념과 민주주의를 수출하는데 모아지게 됨. 이를 학술적으로 재해석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의 확산을 모토로 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이념을 공세적으로 파급코자 하는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가 부시행정부의 정책기조라 할 것임. 관건은 인권, 민주주의, 평화 개념이 서구의 종교적 믿음이 아닌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에 의해 추진되는 모습을 갖추어야만 문명과 종교의 상호충돌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
- 부시정권의 기본적인 대외정책 목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철학적 기반은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4년간 제2기 부시행정부는 테러 및 WMD의 확산을 차단하고 이의 발생원인을 뿌리 뽑고자 총력을 기울일 것임. 그러나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동참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제1기 때와 비교하여 보다 유연한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음. 동참하면 친구 국가이고 그렇지 않으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편가르기식 발상을 유연화하고 방관자들을 포섭하고자 하는 시도를 할 것인가, 그리고 무력사용을 고려하기 전에 갈등현안에 대한 대화해결 노력을 충분히 기울여 절차와 명분에 보다 주목하는가가 그 판별 기준이 될 것임.

## 2.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향후 대응

### 가. 조속한 6자회담회담 재개 추진

- 북한은 내심 미국의 정권교체를 기대하며 제4차 6자회담을 거부해 왔으나, 이제 같은 부시행정부를 다시 4년간 마주해야 하는 환경에 처하였음. ‘시간끌기’ 전략의 양해사항이었던 미 대선변수가 사라진 만큼, 그리고 신 부시행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이라크에 버금가는 시급한 현안으로 다루게 될 것이니만큼, 관련국들간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됨. 북한 역시 그러한 사태의 긴박성(sense of urgency)을 인지하게 될 것인지 주목됨.
- 미국은 북한과의 물밑 양자접촉은 고려하되 공식적인 양자회담은 논외로 할 것이며, 모든 논의절차는 6자회담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을 택할 것임. 차기 6자회담이 부시대통령의 취임(1월 20일) 이전에 개최될지 아니면 신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인선과 대북정책기조가 가닥을 잡은 뒤 성사될지 속단할 수 없으나, 미국정부는 현 시점에서 당장 다음 6자회담의 의제를 조율하는 관련국들과의 실무레벨 접촉을 추진할 가능성이 큼. 대선을 불과 1주일 앞둔 시점에서 파월 국무장관이 방한하여 북핵문제를 논의하고 간 것을 보아도 동 사안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가늠할 수 있음.
- 미국은 제3차 6자회담에서 제시한 로드맵을 기본 출발점으로 설정, 북한의 핵동결 이후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핵폐기로 이행할 것을 재차 요구할 가능성이 큼. 특히,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핵동결과 폐기를 확실하게 관철코자 할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대북조치로서 기존에 발표한 안전보장 제공, 타국들의(한국, 일본) 대북 경제지원 이해 등의 입장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됨. 先 불이행시정, 後 관계개선 고려의 원칙에 확고한 미국으로서는, 핵문제가 먼저

가닥을 잡고 풀려나가야만 대북지원을 담보로 하는 기타 안보의제의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 나. 예상 시나리오

### (1) 조기 타결

- 앞서 기술한 미국의 입장을 염두에 둘 때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6자회담을 통한 조기타결 및 문제의 순조로운 해결 상황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음. 북한은 미국이 안전보장 및 경제적 인센티브를 보다 구체화하는 조건으로 ‘모든’ 핵 폐기에 합의하고 핵동결 조치를 이행하는 것임. 이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사찰 및 추가의제 논의를 위한 후속회담에서 신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6자회담의 유지되고 문제해결 노력이 본격화되는 경우임.
- 이러한 북핵문제의 본격적인 해결과정은 남북 경제교류는 물론 북·일 수교협상을 크게 진전시킴으로써 대북보상에 있어 일본의 실질적인 기여를 이끌어내고, 북한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적극적 참여 역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 6자회담은 북한 핵문제의 성공적인 해결을 발판삼아 향후 가장 영향력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이제까지의 북한의 반응이나 협상전략으로 미루어보아 미국이 서두른다고 해서 쉽게 핵협상에 응하고, 동결 및 폐기를 이행하며, 나아가 사찰까지도 허용하는 결단이 쉽게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그러한 결단을 촉진하려면, 북·미간 인식의 괴리를 좁혀나가고 협상의 조건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단계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임. 미국은 이번에는야말로 첫 단추를 확실하게 채워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애매모호한 합의를 두고 ‘조

기타결'로 규정하는 일은 기대할 수 없음.

## (2) 교착 및 장기화

- 두 번째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북핵문제가 교착하는 경우임. 북한은 일단 4차 6자회담에는 응하나, HEU의 실체와 합의조건을 놓고 공방을 지속하는 등 기존 입장을 반복함으로써 문제해결의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가운데 대화가 교착하는 상황을 뜻함.
- 회의 과정에서 북한은 핵동결과 같은 비교적 쉬운 조치에는 합의하나, 궁극적인 핵 폐기 의사표명의 조건으로 중유제공 재개, KEDO 프로세스의 부활, 대북 적대정책 포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 유보함으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거는 부시행정부의 기대는 점차 소진될 것임.
- 북핵문제가 교착되면 회담 참가국간의 입장차가 점차 심화될 것임. 미국은 보다 강경한 대북 압박조치들을 구상하면서 북핵문제의 UN안보리 상정에 대비, 對 중국·러시아 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임. 중국은 미국과 사태인식은 달리 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설득과 압박을 병행, 북한이 6자회담에 계속 응하도록 유도하고자 할 것이며, 일본은 대미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대북 압박수위를 점차 높여갈 것으로 예상됨.

## (3) 상황 악화

-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정책 등을 빌미로 미국이 제시하는 로드맵 수용 및 추가적 회담 참가를 거부함으로써 上記한 교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시나리오임. 미국은 북핵 및 인권문제의 UN안보리 상정,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강화 등 이른바 '제2의 계획(Plan B)'를 추진하여 대화보다는 압박 쪽에 무게를 두면서 다차원적인 압력을 통한 북핵문제 해

결에 주력함으로써, 한반도 안보상황이 급속하게 경색되는 경우임. 공화당이 상하원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만큼, 미 행정부와 의회간 대북정책 공조도 강화될 것임.

- 중국은 대북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일단 북핵문제의 UN안보리 상정에 반대할 수도 있으나, 북한과의 타협에 대한 기대가 깨질 경우 결국 미국 입장을 따라 UN안보리 상정을 비롯하여 대북 자금지원 차단 및 PSI 동참을 심각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커짐. 이 때 러시아와 일본 역시 부시행정부가 성급하게 군사조치를 고려하지 않는 한, 대북 압박조치에 동참할 것으로 보임.
- 일단 북핵문제가 UN안보리에 상정되면 광범위한 대북 경제제재 조치가 논의될 것이며, 이 경우 한국의 개성공단 프로젝트를 비롯한 각종 대북 사업 및 남북경협이 중단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 이 때 북한은 극적으로 타협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역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더 한층 고조시키는 방법으로 사태를 악화일로로 몰고 갈지 예단할 수 없음.

#### 다. 미국의 단호한 대응 가능성

-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명확히 표명치 않을 경우 미국은 단호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바, 2005년 중 북핵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함. 선거과정에서 북핵문제의 조기해결을 누차 다짐한바 있는 부시대통령은 교착상태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을 것임. 미국은 상황의 호전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한국에 대해 미국과 북한 가운데 양자택일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상황 악화가 반드시 미국의 대북 무력행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라크전쟁 수습문제, 추가적 전쟁의 수행에 대한 부담감 등 여러 변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국이 주변국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무력사용에 돌입할 가능성은 희박함. 미국이 대북 압박정책을 급속히 추진하는 경우 주변국들이 미국의 행동을 제약하려 할 수도 있으나, 북한의 도발적 행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반대로 이들이 대북 압박에 공동보조를 취할 가능성도 있음.

- 미국의 대북 강경태도는 한국의 역할에 따라 좌우될 여지도 있음. 즉, 미국이 충분한 협상노력 없이 성급하게 대북압박에 나설 경우, 6자회담 참가국들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음. 특히, 북한의 에너지난 타개를 위해 경수로(LWR)를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 지원 대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해야 함. 또, 북·미간 강경태도의 상승작용으로 말미암아 북핵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한·미·일 공조를 중심축으로 하여 중국, 러시아의 협력을 적극 이끌어내야 함.

### 3.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동맹의 변화방향

#### 가. 동북아 안정관리자 역할 지속

- 한반도 안보환경에서 미국이 당면한 최대 현안은 북한 핵문제이므로 동사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지속시키고자 외교력을 집중할 것임. 그러나 북한정권이 현재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한 ‘북한문제’를 온전하게 풀기 어렵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 결국 미국은 북한에 대해 불가침 안전보장은 해 줄 수 있으나, 북한의 체제보장은 북한 스스로가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거듭 새로운 국가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얻을 수 있을 것임.
- 제2기 부시행정부가 향후 4년 동안 한반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보다 거시적인 목표는 동북아 현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관리자 역할을 자임하는 것임. 한반도 분단상황의 안정적 관리, 대만문제로 인한 兩岸간 군사적 긴장 억제, 역내 패권세력의 급작스런 등장 방지 등이 주요 정책 목표임. 이를 위해 중국과는 對테러캠페인 동참이라는 명분 하에 편의적 협력관계를 지속하면서, 일본·한국과의 동맹 조정 및 강화를 통해 동 지역에 대한 개입 네트워크를 확충할 것임.

-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저지, 한반도 및 주변지역의 안정화라는 上記 두 가지 목표와 병행하여 미국은 한국, 일본에 주둔시켜 놓은 자국 군대에 대한 군사변환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임. 이는 민족국가간 갈등과 같은 기존의 정태적인 안보위협에 더하여 테러, 난민, 환경, 해로안전, 국제범죄 등 새로이 대두되는 다양하고 예측키 어려운 위협요인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 가능한 군사태세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한국, 일본도 적극 부응하여 동맹국간 상호 군사적 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 나. 주한미군 조정의 가속화

- 한국정부와 기 합의한 내용에 의거하여 토지반환,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기지의 통폐합 및 감축 재배치 작업을 일정대로 추진할 것임. 즉 올해 7월의 제10차 FOTA회의 합의대로 용산기지, 미2사단, LPP사업과 관련하여 총 5,167만평을 2008년까지 한국에 반환 완료하고, 한국으로부터는 이전기지용으로 362만평(평택 349만평, 포항·대구 13만평)을 제공받게 됨. 또 10월 6일 최종 합의한 대로 미군의 토지반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12,500명의 미군 감축 일정 역시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됨.
- 또 미국은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통해 주한미군이 담당해 오던 전방의 10대 군사임무를 한국군에게 이관(2006년 8월까지 대개 완료)하는 것을 필

두로 하여 점차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꾀하고, 주한미군은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안정자’ 역할을 담당하고자 할 것임. 이는 빠져나가는 미 지상군 역할을 한국의 육군이 당장 채워나가야 하는 과제를 제기함으로써 현재의 제한된 국방예산과 자산으로서의 미래전략 개념에 부응하는 첨단 해·공군력을 도모해야 하는 한국군의 중장기적 과제가 지연될 수 있음을 뜻함.

- 주한미군의 경량화, 첨단화, 기동화의 구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전방에 포진해 있던 18,000명 병력을 기동타격부대(stryker)로 재편성, 재배치할 것으로 예상됨. 또 당초 약속한 대로 2006년도까지 110억불을 투자하면서 주한미군의 질적 보강을 꾀할 것임. 이에 한국은 주한미군의 혁신방향이 (1)주한 미 지상군의 화력 및 무기시스템 보강, (2)한국의 정보획득능력 향상 지원, (3)주한 미 공군, 해군력의 강화 등에 맞춰지도록 주문하여 한국군 자체의 전력강화 작업을 보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음.

#### **다. 동맹의 지역화와 포괄화 추진**

- 향후 주한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 방향은 한미동맹의 주요 목표가 더 이상 전면전(full scale war)을 염두에 둔 북한위협 관리에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북한의 전면적 남침에 의한 한반도 유사상황은 그 개연성이 줄어들고 있는 대신, 군사시위·국지도발·대남 심리전·대규모 난민발생·북한체제 혼란 등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MOOTW: 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에 대한 대비태세가 한층 요구되고 있는 안보환경의 도래를 반영하는 것임.
- 나아가 미국은 미래의 한미동맹이 지리적으로 뿐 아니라 그 임무영역에 있어 보다 확대된 동맹으로의 발전으로 추구하고 있음. 한반도에서의 긴

장방지 역할을 북한변수에 국한되지 않은 동북아 차원의 구조적 시각에서 조망함으로써 보다 멀리, 보다 넓게 양국간 군사협력을 꾀해야 한다는 것임.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한국의 의중을 살피며 주한미군 자신이 우선 그러한 행동의 폭을 확보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음.

- 주한미군의 군사변환을 계기로 양국은 이제 군사영역을 뛰어넘어 정치, 외교, 경제통상, 사회문화 등 전반적 영역에 걸쳐 공감대를 쌓아가는 포괄적 동맹관계를 자처하고 있음. 이는 각 이슈와 상황에 국한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단계를 초월하여 세계안보환경을 함께 조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가치와 시야의 공감대 확보를 뜻하는 것임. 관건은 한국이 앞으로 미국이 생각하는 동북아 전략관에 얼마나 수렴할 수 있으며, 한미관계의 발전을 주변 이웃국들과의 전략적동반자 관계와 여하히 병행할 것인가의 문제임.

#### 4. 고려사항

##### 가. 부시 실행정부와의 전략대화 및 신뢰구축 강화

- 주한미군의 감축규모와 일정에 대한 최종 합의 이후 한미 양국이 앞으로 차관급 고위전략대화를 해 가기로 한 것은 이제 세부적인 변화를 거시적인 그림을 그려가며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써 고무적인 일임. 2005년 상반기까지 한미 신안보 구상을 마무리 짓고 미 실행정부와의 정상회담 때 이를 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한미동맹의 미래구상을 개념적 차원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이를 미국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 군, 학계, 재계, 문화계 전반에 걸쳐 대미 네트워크를 유지,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서로의 정책을 이해하고, 이견을 조정하며, 개선점을 논의하는 허심탄회한 대화의 통로

를 확보하여 작은 일이 불필요하게 커져 양국간 인식 차와 불신을 키우는 일을 방지해야 할 것임.

- 한국사회의 대미인식을 예의주시하여 관찰하고 이를 적절히 계도하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됨. 앞으로 주한미군을 위한 평택부지 확보, 한미 방위분담금 협상, 이라크 파병활동 연장, 북한 핵문제 등 미국이 개입된 민감한 안보현안들이 산적해 있음. ‘케리 대통령’ 이었다면 이해해 보고 좀 더 기다려 볼 일도 부시이기 때문에 막연히 싫어하고 거부하는 국민 정서가 표출될 경우 한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임.

#### 나. 북핵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한 노력

- 북한의 협조적인 자세 및 핵포기 결단을 유도하기 위해 북핵문제의 해결 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식량·에너지·경제지원 프로그램 등을 망라한 ‘마샬 플랜’ 같은 경제재건 패키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러한 구상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참가토록 유도함으로써 북한이 ‘미국의 태도’를 문제 삼아 합의를 거부할 명분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함.
- 한국 정부는 필요시 대북 특사파견을 통해 북핵문제에 관한 확고하고도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함으로써 북한의 결단을 촉구하도록 함. 즉, 북핵 폐기시 적극적인 대북지원을 할 것이나,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가 지속되어 사태가 악화될 경우 대북 ‘추가조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함.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핵동결을 우선적으로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것도 바람직함.
- 북핵문제의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핵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아 미국이 대북 강경정책으로 급선회할 가능성에 대비, 한미채널을 보다 긴밀화하고 ‘북핵불용’ 및 ‘한미공조’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최후 협

상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거나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단독행동에 돌입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다. 동맹의 장기 청사진을 담은 미군 재배치 추진

- 주한미군 재배치를 우리의 “협력적 자주국방” 목표추진에 긍정적인 자극제로 활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함. 한국 스스로 보다 많은 국방임무를 떠맡을 수 있도록 무기체계 개선, 작전수립능력 향상, 정보획득능력 고양 등에 매진하는 것은 결국 한 차원 높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보다 평등한 대미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을 키워가는 작업이 될 것임.
- 수세적으로 외부위협에 대응하는 자세를 가질 경우 주한미군과 한미관계의 변화를 미국의 세계전략에 불필요하게 연루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피해의식에 빠져들 수 있음. 한국은 현존 북한위협의 관리, 통일 시나리오 대비, 통일 후 대외역량 강화의 단계적 과제를 안고 있는바, 이렇듯 점차 확장된 안보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보지평을 지금부터 확장해 가야 함. 이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에 입각, 한국의 대외역량과 위신을 세워간다는 취지에 기초하는 것임.
-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구상이 중국, 북한 등 ‘불편한’ 국가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는 염려는 지나칠 필요가 없음.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이익에 기초한 한미동맹은 주변국들과 상호 군사투명성을 제고해가도록 선도역할을 해야 하며, 상황과 이슈에 따라 이들 주변국들의 건설적인 안보역할을 유도함으로써, 의제·참여국·활동범위에 있어 유연하고 신축적일 수 있는 동맹이 되어야 함.

2004. 11. 8

집필: 교 수 김태효  
토론: 연구부장 김성한  
연 구 관 이춘선  
교정: 연 구 원 김태경